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정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경정(1교시) 시험 과목 : 국제법(01), 행정법(04)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형

국 제 법

1. 다음 <보기> 중 국제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그로티우스(Grotius)는 주로 자연법에 기초한 국제법론을 주장하였다.
 - ㉡ 강대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칼보(Calvo) 조항이 등장하였다.
 - ㉢ 19세기 국제법은 탈식민지를 위한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 ㉣ 강대국의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드라고(Drago)주의가 등장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2. 다음 중 '집요한 반대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요한 반대자이론에 대한 지지는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에 충실한 입장이다.
- ② 집요한 반대자이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판례는 영국과 노르웨이 간의 어업사건이다.
- ③ 반대는 국가가 어떤 관습법규가 형성되고 있는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
- ④ 집요한 반대자이론은 국제법의 발전과정 속에서 일시적 위치를 가질 뿐이지 영속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3. 다음 중 'UN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결의의 유형과 채택되었던 상황, 결의의 내용에 관한 분석 등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이 다르다.'라는 판결과 가장 관련 있는 판례는?

- ①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1970)
- ② UN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1949)
- ③ 프랑스 핵실험 사건(1947)
- ④ 텍사코 석유 국유화 사건(1977)

4. 다음 중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 ②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한다.
- ③ 「국제연합헌장」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국제법의 법원 간에는 위계의 서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조약, 국제관습법 상호간에 상충의 문제와 우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이때 특별법 우선과 신법 우선이라는 법해석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강행규범과의 관계에서도 유지된다.

5. 다음 <보기> 중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보 기> —
- ㉠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 ㉡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이라 함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에 각 경우마다 그렇게 불리는 국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 ㉢ “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국가 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 ㉣ “당사국”이라 함은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 ㉤ “체약국”이라 함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그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6. 다음 중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와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박에 의한 조약은 그 내용의 일부만 분리하여 무효화할 수 있다.
- ② 일반국제법의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 ③ 외교관계나 영사관계의 단절은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존재가 조약의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약의 당사국간의 확립된 법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경획정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다음 중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이론이다.
- ② 국제법상 의무이행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할 문제이다.
- ③ 영국은 이원론에 의거하여 의회의 이행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을 적용한다.
- ④ 현대 국제법질서 하에서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경우 국내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8. 다음 중 국제법상 분리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분리독립에 의하여 국가가 탄생한 예가 없다.
- ② 어느 국가의 영토 일부 및 그 영토상의 주민이 분리독립하는 경우 그 국가의 계속성은 소멸한다.
- ③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자결권 행사를 통해서 분리독립이 실현된 예가 없다.
- ④ 어느 국가의 중앙정부가 그 국가 영역 내 특정 지역을 통제하는 지방 조직을 국가로 승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국가가 탄생한다.

9. 다음 중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기구의 목적과 기능, 실행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 ② 국제기구는 법인격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된다.
- ③ 국제기구는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경우 설립현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④ 국가의 포괄적 법인격에 비해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10. 다음 <보기> 중 개인이 권리구제를 위해 직접적 이용이 가능한 국제기구를 모두 묶은 것은?

— <보 기> —

- ㉠ 국제사법재판소(ICJ)
- ㉡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 ㉢ 유럽인권재판소(ECHR)
- ㉣ 세계무역기구(WTO)

- ① ㉠, ㉡
- ② ㉠, ㉢
- ③ ㉡, ㉣
- ④ ㉢, ㉣

11. 다음 중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은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과 「UN헌장」 제2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사이의 경계설정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다.”라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③ 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및 준군사적 활동사건’은 동 원칙과 관련 있는 국제판례이다.

12. 다음 중 국가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상주외교사절의 교환
- ② 영사인가장의 발급
- ③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 ④ 미승인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13. 다음 <보기> 중 국가의 승인 및 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설명에서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보 기> —

국가의 승인과 정부의 승인은 재량행위라고 인정되지만 승인의 재량성을 제한하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다. 국가의 승인에 대해서는 「국제연맹규약」이나 「파리규약」에 위반하여 설립된 국가는 승인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라고 한다. 정부의 승인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정부를 승인하지 말자는 주장을 (㉡)라고 하고 실효적으로 정부가 만들어지면 비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라도 승인하자는 주장을 (㉢)라고 한다. 정부승인에 대한 최근의 국가들의 관행은 (㉣)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 | | |
|------------|------------|
| ① ㉠ 스티븐 주의 | ㉡ 토바르 주의 |
| ㉢ 제퍼슨 주의 | ㉣ 에스트라다 주의 |
| ② ㉠ 스티븐 주의 | ㉡ 토바르 주의 |
| ㉢ 에스트라다 주의 | ㉣ 토바르 주의 |
| ③ ㉠ 토바르 주의 | ㉡ 스티븐 주의 |
| ㉢ 에스트라다 주의 | ㉣ 스티븐 주의 |
| ④ ㉠ 스티븐 주의 | ㉡ 에스트라다 주의 |
| ㉢ 토바르 주의 | ㉣ 제퍼슨 주의 |

14. 다음 중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5년 노트봄(Nottebohm)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적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genuine) 유대(link/connection)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③ 1930년 「국적법 저축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누가 자국의 국민인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④ 1930년 「국적법 저축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그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15. 1951년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지위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다음 중 박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 |
|------|------|
| ① 인종 | ② 궁핍 |
| ③ 국적 | ④ 종교 |

16. 다음 중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② 추방은 형벌에 해당하나 엄격한 사법심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 ④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상호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17. 다음 중 국제법상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자결권에 의거하여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 ② 국제법상 uti possidetis 원칙은 현재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한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였다.
- ③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 당시 국경선에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하였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uti possidetis 원칙을 독립국의 수립 시에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고 밝혔다.

18.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로, 접속수역은 최대 24해리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대륙붕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 ③ 내수·영해·공해의 전통적 삼분법을 수정하여 혼혈적 성격의 특수수역을 인정하였다.
- ④ 접속수역을 제도화하였다.

- ① 제3국은 통과중인 통신문 및 외교행낭에 대한 불가침성을 접수국에서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 ② 제3국은 외교관의 체류목적을 불문하고 그 외교관에게 불가침권을 부여해야 한다.
- ③ 제3국은 노무직원의 통과에 대하여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④ 제3국은 불가항력으로 자국 영역에 들어온 외교관 가족의 귀국보장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25. 다음 중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 ② 외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영사기능은 외교공관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 ④ 영사기관의 소재지와 등급은 과전국이 결정하여 접수국에 통보한 후 확정된다.

26. 다음 중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가항력과 조난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 ② 어떠한 국가도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 창설된 상황을 승인하거나 지원 또는 원조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 ④ 유책국은 1차적으로 금전배상 의무를 부담하며,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27. 다음 중 사인(私人)의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사건은?

- ①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원 인질사건
- ② 아야 데 라 토레(Haya de la Torre) 사건
- ③ 노테봄(Nottebohm) 사건
- ④ 바르셀로나 전철전력회사(Barcelona Traction Co.) 사건

28. 다음 중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② 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③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함이 보통이므로 1심으로 종결됨이 통례이다.
- ④ 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되기도 한다.

29. 다음 <보기>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와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 소송참가를 하고자 하는 제3국은 소송참가의 필요성을 구두로 명시적인 신청을 해야 한다.
- ㉡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소송에서 기존 소송 당사국이 아닌 그 협약의 당사국이 소송에 참가할 경우, 그 국가는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 ㉢ 분쟁당사국은 판결 당시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판결은 당해 사건의 당사국만을 구속하며 선례구속 원칙이 인정된다.
- ㉤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

30.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UN 총회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31. 다음 중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②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병참 지원도 무력행사로 본다.
- ③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 이후에도 피(被)점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④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32. 다음 <보기> 중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 비차별적인 공동책임원칙에 근거한 국제협력
㉡ 오염자 부담
㉢ 지속가능한 개발
㉣ 무과실책임의 원칙
㉤ 사전주의 원칙

-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 ㉤

33. 다음 중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이 배정받은 쿼터보다 적게 배출한 온실가스의 차이분을 다른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공통으로 부과하면서도 감축치를 차등적으로 정하였다.
③ 「파리협정」은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역사적 누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 한정하여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별 감축은 개별 국가가 3년 단위로 제출하는 자발적 기여방안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별도의 등록부를 통해 관리하기로 하였다.

34.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②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③ 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④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도 국가가 아니면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35.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비차별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GATT」상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적용된다.
② 내국민대우원칙은 재정조치에 한하여 적용되며 비재정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승인된 보복조치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④ 「WTO설립협정」에 따라 승인된 의무면제(waiver)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36. 다음 중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시행
②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의 촉진
③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의 장 제공
④ 보호무역의 달성

37. 다음 중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② 영화 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③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④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38. 다음 <보기>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절차 간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보 기>

- ㉠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한 항소 가능성
㉡ 분쟁해결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사건 종료 가능성
㉢ 서면 신청에 의한 절차 개시
㉣ 제소 또는 패널설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협의절차
㉤ 판결 평의 또는 판정 심의의 비공개성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행 정 법

1. 다음 <보기> 중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을 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 ㉡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 ㉢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송금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 ㉣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다.
- ㉤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그에 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2. 다음 중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형식)에 가장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행정입법 ② 행정소송
 ③ 공법상 계약 ④ 행정계획

3. 다음 중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②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해도 이를 중지시킬 수 없다.
 ④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이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4.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는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 ②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다음 중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 ② 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③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④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6. 다음 중 상속세 체납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는 어느 법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② 과잉금지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7. 다음 중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된다.
- ② 행정임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인 행정보조인과는 구별된다.
- ③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8. 다음 중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 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 ③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 ④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9.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고는 사인이 행하는 공법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강학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③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를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라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0. 다음 <보기>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 ㉡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 ① 없음 ② ㉠ ③ ㉠, ㉡ ④ ㉢

11. 다음 중 조세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일단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에 대한 효력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집행력
- ② 내용적 구속력
- ③ 공정력
- ④ 불가변력

17. 다음 <보기> 중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임에도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
- ㉡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 ㉢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처분
- ㉣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당해 처분의 집행을 위해 행한 체납처분

① ㉠, ㉢ ② ㉠, ㉣ ③ ㉡, ㉣ ④ ㉢, ㉣

18.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 ④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19. 다음 <보기> 중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된 취소소송
- ㉡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로 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제기된 거부처분 취소소송
- ㉢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원고적격이 있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취소소송

① ㉠ ② ㉢ ③ ㉠, ㉢ ④ ㉠, ㉡, ㉢

20. 다음 <보기> 중 「행정절차법」상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기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 이상으로 한다.
-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 【자치법규는 (㉢)일】 이상으로 한다.
-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① ㉠ (14) ㉡ (40) ㉢ (20) ㉣ (14)
 ② ㉠ (14) ㉡ (20) ㉢ (10) ㉣ (14)
 ③ ㉠ (20) ㉡ (40) ㉢ (20) ㉣ (20)
 ④ ㉠ (20) ㉡ (40) ㉢ (20) ㉣ (14)

21. 다음 <보기> 중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정보공개청구인은 자신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해당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 ㉢ 정보공개신청이 오로지 권리남용의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행정청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22. 다음 중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 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 ④ 행정상 공급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 단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한 단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3.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 ② 「행정대집행법」상 건물철거 대집행은 다른 방법으로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 ③ 「국세징수법」상의 공매통지 자체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 ④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4.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경과 후 3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강제보전행위인 압류는 사실 행위로서 처분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 ③ 압류대상 재산은 의무자 및 동거인의 소유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생활 필수품의 압류에는 의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 ④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25.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시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조치이다.
- ②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시강제는 「헌법」상 기본권침해에 해당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불법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장 없이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상 즉시강제를 행할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④ 즉시강제로써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즉시강제에 따른 권익침해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26. 다음 <보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27. 다음 중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8.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 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②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③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 ④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 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29. 다음 중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30. 다음 중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관세법」 상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 ③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 ④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31.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행정절차법」의 청문배제 사유인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행정 처분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 통지서의 반송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2. 다음 중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A는 경영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②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B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 ③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재단법인인 수녀원 D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매립목적용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3. 다음 중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34. 다음 중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③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경찰기관이 행하는 작용 중 권력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은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5. 다음 중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임의동행 후에는 경찰관서에서 퇴거가 제한된다.
-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질문에 수반하여 흥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 ③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목적을 수행하는 데 불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의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6. 다음 중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신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경찰허가의 효과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다른 법령상의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경찰허가에 상대방의 신청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의 신청 없이 허가가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
- ④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청이 집단민원의 발생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신청인이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37.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와 경찰무기로 수갑과 포승, 권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이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8. 다음 중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39. 다음 중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 모두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 ②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 ④ 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40. 다음 중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져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④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이 있다.